北, NLL 해상 포사격 배경과 남북관계 전망

한·미에 대화 압박…NLL 무력화 기도

정부, 실무급 대화·옥수수 지원 등은 예정대로 추진

북한이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 으로 해안포 사격을 함에 따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북한이 NLL 무력화를 시도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만 NLL 이남을 걸치는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데 이어 그 구역안으로 해안포를 쏜 것은 무게감이 다르다.

지난해 대청해전의 발단이 된 북한 경비정의 NLL 월선처럼 말이 아닌 '행동'을 과시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지난 15일 대남 성전을 예고한 국방위원회 성명이 단순한 '공갈'이 아님을 무력시위를 통해 보여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북한의 이번 도발은 남측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미국 쪽에도 시사하는 의미가 있다는게 정부 당국의 분석이다. 한반도 정전체제의 '약한 고리'인 서해 NLL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평화체제 협상을 비핵화 협상과 병행하자는 자신들 요구를 미국이 수용토록 압박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고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대남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대화 공세에 호응하도록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는게 당국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관계개선 기조를 재확인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옵션'이 있다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하면서도 개성공단 임금 인상,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 인도적 지원 등 자신들이 원하는 교류.협력사안을 위한 남북대화는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술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관심은 우리 정부의 대응으로 쏠린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자는 우리 정부의 기대와 어긋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해진 것이다.

일단 정부는 북한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되, 예정된 실무급 대화와 옥수수 1만t 지원 등은 그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날 장성급회담 수석대표 명의로 북에 경고 메시지를 담은 전통문을 발송했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데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다음 달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잉대응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은 북한의 '계산된 도발'에 말려드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만큼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기류인 것이다.

다만 북한이 긴장조성 행위를 계속하는 한 남북간에 실무급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북한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으로 해안포 수발을 발사한 27일 오전 인천항에서 해군 함정들이 비상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도시 분양가 인하안은 사탕발림" 김재균 의원 "정부 1년전 폐기안 재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역차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내놓은 혁신도시 분양가 인하 방안이 1년 전 정부 스스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내린 '폐기안'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균 의원은 27일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는 대국민 선전포고다'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혁신도시 분양가 14% 인하안은 지난해 2월 정부 스스로 고품격 도시로서 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부정적으로 결론내렸던 사항"이라며 "정부 발표는 '재탕'도 아닌 급조해서 내놓은 '빈껍데기'"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이 내놓은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지난해 2월 혁신도시 분양가 인하 방안을 검토·분석한 뒤 '추가 국고지원이 없는 경우, 조성비·보상비·유상공급면적의 조정이 어려워 조성원가 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문건은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이 작성한 것으로, 균형발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지역발전정책'을 보고한 뒤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김 의원이 제시한 당시 균발위의 대통령 보고에는 ▲공동택지, 유보지 등의 용도변경을 통해 자족시설 용지 면적을 현재보다 30% 수준(244만.2천㎡→316만6천㎡)으로 확대 ▲공원·녹지율 및 용적률 조정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기업, 연구소 등 유치활성화를 위해 자족시설 용지 공급 확대 및 용지공급 가격 인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확정한 '지역사업 보완방안'과 거의 흡사하다.

정부는 지난 22일 녹지와 공원면적 조정 등을 통해 가처분용지(자족기능용지)를 현행보다 38% 확대(244만㎡→338만㎡)함으로써 분양가를 14% 인하한다는 보완 방안을 발표했었다.

김 의원은 이에따라 "결국 1년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결론내렸던 사항을 세종시 수정안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재추진하겠다며 발표한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고 사기극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측은 또 "광주·전남혁신도시 시행사 등도 당시에 공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3.3% 조성원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세종시 입법전쟁

친이-친박, 여야간 정치권 전면전

정부의 27일 세종시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여야는 물론 여여 간 전면전의 시작을 의미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의 세종시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선전포고'로 규정, 원내외 투쟁과 함께 정운찬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투쟁 카드'로 내세울 방침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와 관련, "권력자가 누른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표심을 바꿀 리 없어 부결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활용하고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여당 내 친이(친 이명박) 등 주류와 친박(친 박근혜)계 간 대립도 점입가경이다. 세종시 원안 추진을 고수하고 있는 친박계 뿐 아니라 그동안 중립지대에 있던 소장파 및 중도그룹까지 정부의 '세종시 속도전' 반대에 가세하면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날 2월 임시국회의 한나라당 국회 대정부질문자가 결정되면서 친박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질문자 35명 중 친이, 친박계 의원의 숫자가 각각 20명과 10명 정도로 배분된 것이다.

더욱이 친이계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세종시 관련 발언을 해 온 김용태 의원과 세종시법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동규 의원, 백성운·진수희·이군현·강승규·정옥임 의원 당내에서 목소리가 큰 인사들로 구성된 반면 친박에서는 이정현 의원 등 그동안 세종시 수정과 관련, 친이계와 정부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해온 인사들은 대부분 제외, 의도적인 질문자 선정이 있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수정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면서 세종시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여권 주류는 '정부의 세종시특별법을 입법예고→3월 초 전면 개정안 국회 제출→4월 임시국회 처리'라는 일정표를 작성하고, '세종시 민심'의 분수령이 될 설 연휴 전까지 수정 여론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권과 영남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친박계는 물론 소장파와 중도그룹도 정부의 세종시 속도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향후 정국 구도는 복잡다단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월 상임위 심의→4월 본회의 수순 예상

친박계 끝까지 원안 고수땐 통과 불가능

세종시 수정안 입법 절차

정부가 27일 세종시 수정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입법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정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법안은 행정도시 건설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1월27일~2월16일'을 입법예고 기간으로 정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를 받게 된다. 통상 규제 심사에 15~20일, 법제처 심사에 20~30일이 소요되지만, 해당 부처와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이들 법안의 경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는 시점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개정법안 제출시기는 정부가 한나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3월 초에 하는게 타당하다"며 말했고, 법제처는 국회 제출시점을 '2월 26일까지'라고 밝혔다.

제출 시점이 2월 말이든 3월 초든 2월27일부터 3월1일까지가 공휴일이라는 점에서 3월2일로 폐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세종시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세종시 논의는 3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상 3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지만, 상임위 개최는 가능한 만큼 소관 상임위가 열릴 수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운영·지원 특별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원 특별법 등 2개의 제정안은 행정안전위와 교육과학기술위에서 계속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3월 상임위 심의 → 4월 본회의' 수순이 예상되고 있으나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내 친박계의 반발을 감안하면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쟁점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의 경우 전체 29명 가운데 한나라당내 친박(친박근혜)계가 4명이고, 야당이 12명으로 과반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세종시 수정을 위한 상임위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설령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친박계와 야당이 재적의원의 과반을 점하고 있어 친박계가 끝까지 원안을 고수할 경우 수정법안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합뉴스